

지난해 출생아 기대수명 '83.5년'

통계청 '지난해 생명표'

기대수명 남자 80.6년, 여자 86.4년
17개 시도별선 1위 서울, 17위 충북
암, 심장, 폐렴으로 사망확률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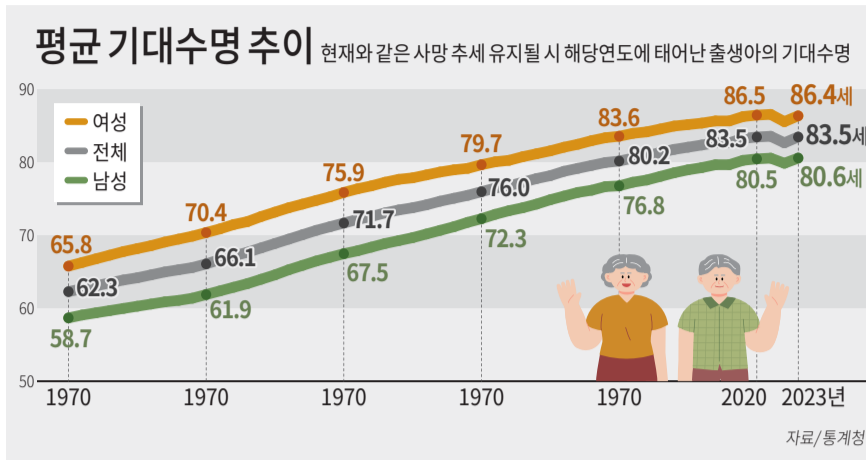
지난해 출생한 남자와 여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신생아들 평균에 비해 각각 2.2년, 2.8년 더 살 것으로 예상됐다. 2023년 태어난 아이 기준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2022년보다 0.8년 늘어났다. 10년 전과 비교해서는 2.1년 늘었다.

통계청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생명표'를 발표했다. 생명표는 현재와 같은 사망 추세가 계속 유지될 시 특정 나이의 사람이 몇 년 더 살 수 있는지 보여주는 표를 일컫는다.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83.5년이었다. 남자는 80.6년, 여자는 86.4년으로 남자는 전년대비 0.7년, 여자는 0.8년 증가했다. OECD 평균은 남자 78.4세, 여자 83.6세 수준이다.

남녀 격차는 지난 1985년(8.6년) 정점에 달한 뒤 좁혀지는 추세다. 남녀 기대수명 격차(5.8년)는 OECD 평균(5.3년)보다 여전히 컸다.

남자 기대수명이 가장 긴 국가는 스위스(82.3년)로 우리나라보다 1.7년 길고, 여자의 기대수명이 가장 긴 국가는 일본(87.1년)으로 우리나라보다 0.7년 길었



다. 우리나라 여자의 기대수명은 일본에 이어 OECD 2위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국내 17개 주요 시도별로, 기대수명은 서울(85.0년)과 경기(83.9년) 순으로 높고 충북(82.4년)과 전남(82.5년) 순으로 낮았다.

성별로, 남자는 서울(82.0년), 세종(81.3년) 순으로 길고 전남(79.3년), 충북(79.4년) 순으로 짧았다. 여자는 서울(88.0년), 제주(87.7년) 순으로 길고 충북(85.4년), 울산(85.5년) 순으로 짧았다.

작년에 태어난 아이가 암, 심장질환, 폐렴 등 3대 사인으로 사망할 확률은 남자 43.7%, 여자 35.4%로 나타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2022년과 비교하면 남자와 여자 모두 3대 사인인 암, 심장 질환, 폐렴에서 사망할 확률이 증가했다"며 "10년 전과 비교하면 남자와 여자 모두 폐렴에서 사망할 확률이 가

장 많이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남자 23.8%, 여자 15.0%로 3대 사인 중 가장 높았다. 심장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은 남자 8.9%, 여자 10.9%, 폐렴으로 사망할 확률은 남자 11.0%, 여자 9.5%다.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은 남자 6.3%, 여자 7.3%로 집계됐다.

향후 남자는 암, 폐렴, 심장 질환 순으로, 여자는 암, 심장 질환, 폐렴 순으로 사망할 확률이 높았다.

폐렴, 심장 질환, 코로나19, 알츠하이머병 등은 대체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각 사망원인으로 사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자살, 운수 사고 등은 대체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해당 사망원인으로 사망할 확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고용부, '유연근무' 국민 의견 듣는다

온라인 유연근무 정책제안 게시판 마련

고용노동부는 온라인 유연근무 정책 제안 게시판을 마련해 노사, 국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체감도 높은 정책을 모색한다고 4일 밝혔다.

시차출퇴근,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재택근로제, 근로시간 단축제,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확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국민 누구나 활용사례, 건의·불편사항 등을 바탕으로 제안할 수 있다.

올해 통계조사 결과, 임금 근로자의 반 이상(55.8%)이 유연근무를 활용 중이거나, 또는 활용을 희망하고 있는 것

으로 확인됐다. 유효한 저출생 대책 중 하나로 재택근무나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제안된 내용을 정책 검토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오는 22일까지 들어온 제안에 대해 추첨을 통해 50명에 커피쿠폰도 제공할 예정이다.

편도인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에 생산성을, 근로자에게 일·생활·균형을, 사회적으로는 저출생 해소를 위한 유연근무가 확대될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전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장 담그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韓 23번째 무형문화유산

유네스코가 우리나라의 '장 담그기 문화'를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했다. 장 담그기는 한국 23번째 무형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렸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 정부간 위원회는 3일(현지시간)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회의를 열고 한국 장 담그기 문화를 신규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장 담그기는 주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성별, 연령, 사회 집단의 가족 구성원이 수행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관련 지식과 기술은 주로 어머니나 시어머니가 딸과 며느리에게 가족 내에서 전승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명인이나 지역사회 단체도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장은 특정 가족의 정체성을 반영하며, 가족 구성원 간 연대를 촉진한다"며 "발효와 숙성 성공을 위해 부적을 사용하거나 의식을 거행하는 등 관련 문화 관행도 탄생시켰다"고 평가했다. 한국인들이 장의 건강 효능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기순도 명인의 모습

/한식진흥원

이번 등재로 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대두 생산이 늘어날 것이라는 게 위원회측 전망이다. 또 콩 생산량 증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 식량 안보와 지속 가능한 농업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 담그기는 콩을 주재료로 메주를 만든 뒤, 이를 발효시켜 된장과 간장 등을 만드는 전통적인 과정을 가리킨다. 콩 재배부터 메주 만들기, 장 담그기, 장 가르기, 숙성과 발효 등 과정을 거치는 전통 제조법은 중국 및 일본과 구별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단순한 음식 준비를 넘어 한국의 전통 식문화와 생활 방식을 반영하는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평가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환경부, '염인정제도' 명확성 개선

물환경보전법·하수도법 개정안
오늘부터 40일간 입법예고
이차전지 폐수 처리서 혼선 해결

정부는 이차전지 폐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했던 혼선을 해결하기 위해, 염 폐수 처리수의 해양 방류 시 적용됐던 염인정제도의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정비했다.

환경부는 오는 5일부터 이차전지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염폐수 처리수를 해양에 방류할 때 적용했던 염인정제도가 기간 해양생물독성검사, 염의 범위 등에 대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차전지 폐수 적용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우선, 염인정을 받을 때 사용되는 독성 검사 해양생물종을 발광박테리아와 윤충류 2종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

에는 염인정 시 보통 발광박테리아 1종에 대해 독성 검사를 실시했으나, 이차전지 염폐수의 주성분인 황산염에 민감한 윤충류를 추가해 해양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하게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염의 정의를 바다물의 주성분 6종인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칼슘 이온, 마그네슘 이온, 황산염, 염소 이온 등으로 명확히 규정해, 전반적으로 불분명했던 부분을 정비했다.

염인정 신청 요건도 확대된다. 그동안 염인정을 신청하려는 업체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 외에도 시운전 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시운전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나 변경을 완료한 후, 시범적으로 가동하는 기간(30~70일) 동안 이뤄지며, 시운전이 종료된 뒤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초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규칙의 세부내용을 정하는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도 순차적으로 연내에 행정 예고할 계획이다.

또한, 염인정이 가능한 황산염 참고 수치 등 염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염인정 안내서'와 '염폐수의 공공처리장 적정 유입기준' 등에 대한 안내서'를 연내에 마련해,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해양에 방류하는 처리수가 해양생물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항을 명확히 하고 구체화 한 것"이라면서 "환경영향과 기업 이행가능성을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지속가능한 토양 위해 전 세계 노력 촉구"

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 '세계 토양의 날'

'세계 토양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오는 5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에서

'세계 토양의 날'은 토양의 중요성을 알리고 토양 보전을 위한 전 세계의 노

력을 촉구하기 위해 2013년 유엔 제68차 정기총회에서 12월 5일로 지정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정부 기념행사를 개최해 왔다.

올해로 10회를 맞는 이번 기념행사는 '지속가능한 토양을 위한 측정, 관찰, 관리'를 주제로 개최된다. /세종=김대환 기자

근로복지공, 아태지역 사회보장 우수사례 선정

공모전서 총 7개 선정

근로복지공단은 국제사회보장협회(ISSA)가 개최하는 '아태지역 사회보장 우수사례(ISSA Good Practice Awards) 공모전'에서 최우수상 2건을 비롯해 총 7개 사례가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우수사례 공모는 ISSA가 3년마다 개최하는 행사로, 아태지역의 60여 개 회원 기관이 제출한 산재보험 등 다양한 사회보장 서비스 사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공모는 혁신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전 세계 사회보장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인정받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총 7개의 사례를 제출했으며, 이 중 로봇기술(RPA)을 활용한 산재보상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와 직업 복귀 통합지원시스템 등 2개 사례가 최우수상(Certificates of Merit with Special Mention)을 수상했다. 해당 기술을 통해 단순 반복적인 산재보상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고객 편의를 향상시킨 점, 그리고 산재근로자의 특성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며 메타버스 기반 취업지원 전문 상담 등을 통해 산재근로자의 직업 복귀를 효과적으로 지원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코로나 이후 시대 업무방식의 혁신사례 등 나머지 5개 사례 모두가 우수상(Certificates of Merit)에 선정돼 공단이 수행하는 사회보장서비스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일하는 삶의 보호와 행복에 기여하고, 아시아를 넘어 세계 사회보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전했다. /세종=김대환 기자